소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전 산 등 록 부
차 장 이 종 헌

1. 머리말

2001년도의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삼척동자도 훤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니, 너무 귀가 따갑도록 지겹게 들어와서 이제는 불감증환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를 깊이 생각지 않는것은 무슨 이유일까?

『소도 몇마리 안되는데 그만 기르면 되지 뭐 !』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사를 아주 높고 튼튼하게 지어서 값 좋을때 소 기르다가 수입개방되면 공장으로 임대나 놓을까?』라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소를 기르는 사람 중에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 축산인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다. 심지어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엇하러 비싼 쇠고기를 생산하려고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외국에서 값싼 쇠고기 사다먹으면 그만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식의 막연한 생각속에서는 어려운 역경을 파헤쳐 넘어가려고 애를 쓰거나 몸부림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힘든일은 남이 하길 바라며 골치아프고 더러

운 직업은 선택하지 않는 신세대의 버릇과도 같은 사고방식이 어느사이 우리 세대를 책임져야 할 기성인들 중에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양축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혼자 열심히 해서 될일도 있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일들도 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을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는 일들을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일 또한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2.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본 사업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두 찬성을 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사람 주민등록증과 같은 등록제도를 하게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정확한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축산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일선 시·군에서도 소규모지만 자기 지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가 있으며 시·군 자체의 사업기반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의 자료만 정확하게 파악된다면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에 대한 자료는 자동적으로 나와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자료수집에 의한 개량지침활용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축질병, 방역조직도 갖출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과 연계될 중요한 사업계획이 있다.

그것은 『송아지 생산기반확보와 생산안정제』이다.

이미 알고있는 양축가도 있겠지만 일본은 1991년 4월 1일부터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었다. 사실 일본에서는 수입개방이 되기전에 축산정책을 담당하는자나 양축가 모두 수입개방이 되어도 일본에서는 일본 특유의 화우고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였었다. 아무리 외국의 쇠고기가 들어와도 일본 쇠고기는 외국산과 질적 차이가 있고, 일본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소 가격이나 쇠고기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실제로 수입개방 되고난 2년후('93년)까지도 그 가격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94~'95년도에는 약 10만엔(한화 80만원)정도 그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89년에 이미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도』를 만들어서 만일의 하락에 대비하여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양축농가에게 만족하진 못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 바탕은 일본 화우등록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일본의 거의 모든 소들이 태어난후 자우등기를 하는데에 그 기반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으로 생산되는 모든 소들을 전산등록 처리하면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여러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본 사업은 지난해에 Task Force팀(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을 하면서 곧바로 사업시행에 착수하였다. 정부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소 전산화사업을 실시해야만 수입개방 이전에 양축농가가 안심할 만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업수행중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셈이 되었고, 극히 일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없는것은 아니었다.

우선 본 사업을 어느곳에서 주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체제에 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가장 앞섰기 때문에 전국의 173개 시·군과 10개 광역시, 군, 구등 183개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지역축협 및 낙협,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전기업목장,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이장등 약 5,000여명의 전산화 추진요원을 해당 시·군별로 위촉하여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일거리만 많아졌다는 불만도 있다. 실제로 어느 시의 추진위원회는 축산직 1명이 소·돼지·닭의 생산, 유통, 개량, 수급등을 모두 맡는곳도 있으며, 축산계가 있다고 하여도 계장님을 포함하여 3명밖에 없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담직원을 1~2명씩 추가 배정하면 그보다 더 좋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하여 보면 어떨까?

농촌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양축농가도 갈수록 줄어들고만 있다. 우리의 아버지시대(1세대)가 키우는 1~3두의 양축가가 60%정도인데 1세대 이후에는 양축농가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에 수입개방이후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또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산업을 떠날지도 모르지 않는가?

축산직 공무원, 지역축협 및 낙협, 인공수정사, 수의사등 축산업에 의하여 존속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은 양축농가가 없이 우리만 필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하여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결국, 지금의 사업이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앞으로도 언제나 양축농가가 있고, 소가 있어야만 우리가 있는다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있어야만 양축농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되는 일이다.

이번 사업이 조금 어렵고 고생이 된다하여도 양축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한다면 조그만 불만쯤은 기쁜마음으로 승화되지 않을까?

4. 양축농가는 무엇이 불만인가?

소 전산화사업은 양축농가를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의 소리도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30두 미만의 소규모 양축농가보다는 부업규모 이상 큰 규모로 기르는 양축농가의 불만이 더 클것이라고 본다. 혹시 전두수를 조사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산화요원이 조사하는 내용중에 『소 사육농가 실태조사표』와 『소 개체전수 조사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육자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축사시설규모, 사료기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본 자료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획이나 계획교배등 개량사업, 방역자료와 부수적으로 도난 및 밀도살근절 등의 자료로서 축산발전 및 진흥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부당 유출하는 것은 절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읍·면의 재무계 등에서도 사육두수나 규모를 몰라서 세금부과를 못하는것이 아니라 농·축산업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서도 이를 매정스럽게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소를 키워서 돈을 벌었다고 좋은차나 타고 으시대는것이 더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한 사료부가세 영세율적용을 받으려고 하다보니 30두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혹시라도 아버지 앞으로 25두, 아들 앞으로 30두, 부인 앞으로 몇두 등으로 해 놓았다고 하여도 본 사업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양축가들과 축산정책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사료전체를 부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에 100% 전체 참여하라는 강제조항은 없다. 하지만 사업의 근본목적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축가를 위하여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물론, 현재의 조사사례비(두당 ₩6,000원 상당)자체가 너무 저렴하고 이또한 젖소를 사육하는 양축가는 그나마도 혜택이 가지 않는다. 시내까지 나오려면 조사 사례비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지도 모르고, 더구나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에서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양축가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시·군의 축산계(추진위원회)와 지역축협에서 보다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협조를 한다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부처인 농림수산부와 협조단체(축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중 발생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본 사업이 보다 확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문제되는 업무를 계속하여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5. 사업추진중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인가?

소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 추진위원회, 양축농가에서는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직접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못한 점은 소 전산화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올려서 추

진위원(시 · 군), 전산화요원, 양축농가에게 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가. 본 사업은 시 · 군 축산계에서 기존업무 이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담직원의 인력보강 계획은 있는가?

— 본 사업에 대한 인력보강계획은 없다.

양축농가와 축산발전을 위하여 어렵더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적은 액수이지만 업무추진비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나. 조사사례비(₩6,000원)지급에 대하여 지역축협과 거리가 멀거나 도시지역, 낙도, 산간오지 등에서는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 원칙적으로 지역축협에서는 사료판매시 문전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료 1포씩 배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을에서 사료를 구입시에 같이 신청하거나 리 · 동별로 일괄적으로 모아서 주문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축협중앙회, 지역축협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통보할 예정이며 보다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건의하여 주기 바란다.

다. 전산입력수수료(개체조사표 1두당 60원)는 어떻게 지급하는가?

— 전산입력수수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시 · 군 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농림수산부로 직접 전산입력할 수가 없다. 시 · 군청 축산계에서 직접 입력한 물량을 우선 P.C에 입력하고 있다가 농림수산부 전산실의 증설시('96년 3월중 예정)송신할 수 있다.

시 · 군 양정계 단말기나 통계출장소 단말기로는 지금도 입력할 수가 있다.

전산입력수수료 신청방법은 시 · 군에서 농림수산부로 자료송신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을 하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시 · 군 추진위원회의 신청과 농림수산부 전산실의 입력숫자 확인후 무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임시고용, 아르바이트, 전산요원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P.C통신을 위한 전용회선이 없거나 통신사용료가 없는데 이는 어떻게 하나?

— '96년부터는 전용회선에 대한 통신사용료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95년도에는 P.C, FAX등 주변기기의 구입때문에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96년 회계년도에는 이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다. 여기에서 지급되는 내역은 반드시 소전산화사업에 한한것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바코드이표 장착중 송아지유산 또는 작업자의 부상등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는가?

— 현재는 없다.

임신, 만삭등 유산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때는 『소 사육농가 실태조사표』, 『소 개체 전수 조사표』만 기록하고, 바코드이표는 송아지 생산시에 어미와 송아지에 같이 부착하도록 당부를 하고 전산화요원께서는 특별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바란다. 이 또한 기초전산화사업이 종료되면 '96년도 이후 송아지 생산시에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농림수산부에 건의중이니 확실하게 송아지 바코드생산중 유, 사산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 · 도에 행정보고를 하여 주기 바란다. 참고적으로 가축위생사업소 등에 의뢰하여 해당되는 사항의 내용도 첨부를 하여 주기 바란다.

바. '95년도 사업과 '96년도 사업의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데 이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95년도의 소 전산화사업(한 · 육우 암소 및 젖소 암소+'95년 10월 30일 이후~12월 31일)은 축산발전기금의 예산이며, '96년도 부터는 농특회계이다.

한 · 육우 암소+젖소 암소등은 '96년도에 바코드를 장착하였어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된다.

사. 한우개량단지 관리대상우는 바코드 장착비의 지원이 안된다는데?

— 한우개량단지 관리대상우라는 말은 전국 250개 한우개량단지와 한우개량농가 등록우 약 185,000두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축협에 전담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원이 바코드이표를 장착하되 장착수수료 1두당 3,000원은 누가 장착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우개량단지내의 비등록우에 대하여는 장착수수료가 지급이 되며 한우개량단지 등에서 지도원이 관리대상우에 대한 임무를 다하고 비등록우에 대하여 바코드를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장착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다.

아. 바코드장착시 해당 시 · 군을 벗어나 바코드이표를 장착하였을때 수수료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수수료의 신청은 소가 있는 해당 추진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는 전산화요원을 위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바코드 장착전에 소가 있는 시 · 군 추진위원회(축산계)에 1차 문의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 시 · 군에 관리카드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하는가?

— 관리카드는 바코드를 장착한 소 1두 1두에 대하여 읍 · 면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기 바란다.

이는 전산입력은 하지 않으며 양축농가에서는 본 관리카드를 이용하여 개체별발정, 인공수정, 출산, 번식기록등 양축농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

차. 바코드장착중 실수로 인하여 훼손된 이표는 어떻게 하는가?

— 훼손된 이표는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추진요원에 해당 바코드번호(9자리)

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며 기초전산화사업 종료후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한후 처리를 하되 가위등으로 잘게 분해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6. 맺음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누가하고 누가 하지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주관부처인 농림수산부에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예산확보등 전체사업을 주관하며 시 · 군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조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바코드장착수수료와 송아지 생산시에 지급되는 조사사례비의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기자재공급, 교육홍보, 전산등록증발급 및 발송등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산하의 1,000여명의 인공수정사는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수정 업무외에 전산화요원으로 위촉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사업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인가?

단순하게 소를 사육하는 양축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양축가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축가가 존재하여야 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업초기에는 크고작은 문제점이 있을테지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있을 것이다.

축산업의 한단계 발전을 위하여 우리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좀더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서 바코드이표 장착후 찍은 기념사진〉